
대한민국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배포

일반

CCPR/C/79/Add.6

1992년 9월 25일

원문: 영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대한민국

1. 본 이사회는 1992년 7월 13일, 14일 및 15일에 열린 제1150차, 제1151차 및 제1154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 (CCRP/C/68/Add.1)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다.*

A. 서론

2. 본 이사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된 당사국의 성의 있는 보고서에 사의를 표한다. 상기의 보고서는 본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본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협약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이사회는 대표단이 제공한 명확하고 광범위한 구두 답변과 상세한 의사 표시에 사의를 표한다.

* 1992년 7월 29일에 열린 제45차 회기(1173차 회의).

B. 긍정적인 측면

3.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이 최근 수 년간 본 협약과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인권조약 가입하고 이에 따라 본 협약 제41조에 대한 선언을 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점에 만족을 표한다. 본 이사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본 협약의 보류를 철회하기 위한 검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법률적 구조의 제공에 관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현재 국내정치에서의 반대입장도 상당히 수용할만하다. 독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 규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4. 본 이사회는 남북한의 관계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최근 화해, 협력 및 불가침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결정은 긍정적인 전기로 보인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와해와 무력도발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보호와 통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D. 주요 문제영역

5.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본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은 본 협약의 제2조와 제26조에 비추어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우려는 헌법 제37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다양한 권리와 자유가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는 불식되지 아니한다.
6. 본 이사회는 주요 관심사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국내의 공공질서에 의미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영향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는 일반 법률과 특히 이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만으로도 국

가안보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내용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와 본 협약에서 용인하지 아니하는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7. 본 이사회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경찰의 지나친 권력행사,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권의 범위 및 제12조의 이행, 특히 북한 방문과 관련한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사회는 수감자들이 재교육을 받는 상황이 재교육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 갇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혹함의 정도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 협약의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간첩활동의 정의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국가기밀의 포괄적인 정의 역시 잠재적으로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본 이사회는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는 위반행위에 절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본 협약 제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기소 전에 심문을 위한 긴 기간은 본 협약 제9조 3항과 배치되고 있다. 기타 관심분야로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장기간 인신구속, 특정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본 협약 제15조에 기술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집회 및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요구 등이다.

E. 제안 및 권고사항

9. 대한민국이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룬 인권존중에 관한 긍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본 협약의 조항에 일치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이사회가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완전한 이행에 주요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인 철폐를 위한 시도가 이행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몇몇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형규정 범죄를 축소하고 동 협약 제15조의 조항내용이 형법에도 적용되도록 하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의 이행에 제한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14조에 관한 유보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본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